

1. 촘촘한 안전성조사 체계 구축

- (조사 대상) 관리대상 품목(278개)을 현행 2단계(중점/일반관리)에서 **엔택트 관리 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하여 4단계로 **빈틈없이 관리체계** 구축

<현 행>

품목 구분	성격
중점 관리	부적합률 상위 등 위해 우려 품목
일반	계절용품 등 중점관리 이외 품목

<개 선>

품목 구분	성격
① 중점관리	현행과 동일
② 엔택트	온라인 엔택트 관련 수요 급증제품
③ 사각지대	최근 3년간 미조사 품목 등
④ 일반관리	①, ②, ③ 제외 기타 품목

- ① **【중점관리 품목: 50개】** 부적합률 및 사고율 등이 높은 품목 50개를 '21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조사·관리(년2회, 정기조사)

* (제외) 2년연속 부적합률이 '0'인 헬스기구, 예초기날 등 7개 품목
(신규) 전년비 부적합률 상승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7개 제품 신규 지정

< '21년 중점관리대상 50개 품목 >

구분	어린이용품(17개)	생활용품(13개)	전기용품(20개)
관리 대상 (50)	유지 품목 (43)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학용품,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가족제품,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킥보드, 유아용 침대, 아동용 이단 침대,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서랍장,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레이저 용품, 속눈썹 열 성형기, 가스라이터, 스포츠용 구명복, 기름난로	전기매트, 전기점질기, 전기오븐 기기, LED 등기구, 멀티콘센트, 직류전원장치, 전기온수매트, 전기방석, 조명기구용 컨버터, 전기요, 전격살충기, 형광등기구, 전가스탠드, 가정용 소형변압기 발육조, 백열등기구, 체인형등기구
	신규 지정 (7)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고정식자전거	휴대형 그릴, 전기장판, 누전차단기
제외 (7)	지정 해제 (7) 어린이용 물안경,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휴대용 예초기의 날, 헬스기구	전기냉장·냉동기기, 전지

- ② **【엔택트 품목: 20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살내 여가활동** 및 **개인 취미활동** 등 사용이 많은 제품을 **엔택트 관련 품목으로 별도 지정(년1회, 정기조사)**

< '21년 엔택트 품목 >

구분	어린이제품(6개)	생활용품(6개)	전기용품(8개)
대상 품목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킥보드,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실내용 바닥재, 이륜자전거, 전기 자전거, 헬스기구, 가정용 섬유 제품, 합성수지제품	직류전원장치, 발육조, 전지, 전기 마사지기, 후드믹서, 전기식조리기, 주방용전동기기, 음식물처리기

- ③ **【사각지대 품목: 32개】**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미 실시[●], 안전기준 준수대상 위해 우려[●], 소비자기관 요청[●] 등 신규로 발굴지정(년중 정기조사에 포함)

< '21년 사각지대 32개 품목 >

구분	①최근 3년간 조사 미 실시 제품 (21개)	②안전기준 준수 위해우려 제품 (5개)	③한국소비자원 요청 제품 (6개)
대상 품목	(안전인증) 전자레인지, 전자캐 페기 등 4품목 (안전확인) 이미용기기, 전기보 온기 등 7품목 (공급자) 충전용전동공구, 주류 숙성기 등 10품목	(부적합률 미개선 품목) 텐트, 고 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 자, 반사안전조끼 (유통량 상위품목) 가정용 섬유제 품	(안전관리 강화) 미끄럼방지타일, 합성수지제품, 모니터, 침대매트리스 등 4품목 * 신유형 문구 등 조사 요청 품목 (2개)는 수시조사에 반영

- (조사 방식) 안전성조사 규모를 **확대**(조사건수: 5,286→5,500개, 품목수: 96→108개)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

- (정기조사) 현행 계절성(신학기, 여름/겨울용품) 수요집중품목과 중점관리품목 정기 조사에 **엔택트 관련품목을 추가하여 확대 조사(5→6회)**

- ▶(계절성 수요집중품목, 연 3회) 신학기제품(2월말), 여름용품(7월초), 겨울용품(12월초)
▶(중점관리품목,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위해도높은 품목 집중조사
▶(엔택트 관련 품목, 연 1회) 기본 1회 조사로 하되, 필요시, 수시 조사도 병행

< '21년 정기 안전성조사 운영계획 >

기존('20)			개편('21)		
1차	신학기	2월말	1차	신학기	2월 말
2차	중점관리 1차	5월초	2차	엔택트 관련 품목	4월 초
3차	여름용품	7월 중순	3차	중점관리 1차	5월 말
4차	중점관리 2차	10월 초	4차	여름용품	7월 중순
5차	겨울용품	12월 초	5차	중점관리 2차	10월 초
			6차	겨울용품	12월 초

- (수시조사) 정기조사 대상품목 이외에도 **국화·언론 등 대외관심 품목, 사회적 이슈 품목** 등을 우선 조사하여 정기조사 틈새 보완

- 또한,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해외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조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

* (사례) 어린이집, 키즈카페, 요양시설, 양로원 등

- (온라인제품 조사강화)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제품의 조사 비중을 보다 확대**(현행 50~60% 수준)

2 간단한 리콜 이행점검으로 미회수 리콜제품 최소화

- 리콜이행점검/평가 강화 및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 강화
 - (전담책임자) 업체별 실적 정기 점검(3~5회)외에도, 수시 유선점검, 사업자의 리콜문의 대응 등 이행과정의 협력자 역할 수행
 -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통보된 리콜제품 재유통 건에 대한 후속조치
 - (회수율 관리)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후 1개월 내 점검을 조기 개시하고, 업체별 점검 강화를 통해 회수율 관리
 - (감시 전담요원 운영) 온라인몰을 연중 모니터링하여 리콜제품 재유통을 적발하는 전담요원(4명) 운영(적발후→우리원, 관리원 실시간 통보)
 - 리콜제품 적발·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추적 관리
- 리콜 불이행 사업자 후속조치 강화 및 리콜제품 소비자 홍보 확대
 - (보완명령 강화) 실적 미흡사업자 처분 규정(법 시행 '20.6.11)에 근거,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처분 적극 시행
 - 정부의 보완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강화
 -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제2항제3호에 근거,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12.10 개정)
 - (소비자 판매관) 소비자 맞춤형으로 관련 알림장 앱, 맘키페 등을 추가 확대 활용, 리콜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리콜 참여 유도
-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제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 (연중 감시) 6개 소비자단체, 관리원과 공동연계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불법제품 감시(감시원 약 200명) 활동 강화
 - KC미인증 등 불법제품 유통 적발 시,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실시

3 내실있는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시장 퇴출

- 신고 접수 및 처리/관리방식 개편
 - (신고접수) 국민신문고를 신고처로 이용 중인 현행 방식 외에 불법제품 정보, 위반내용 등 신고방식을 체계화한 온라인 전담 신고센터* 운영
 - * (타 기관 사례) 불량식품 신고센터(식품안전정보원), 가짜석유 신고센터 등(석유관리원) 등이 운영 중이며 국민신문고는 기관 민원 등의 주 접수처로 활용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 (시스템 확산) 금년 도입을 완료한 다이소, 쿠팡 외에도 중저가 생활용품 유통(알파문구 등), 지역 마트백화점(대구백화점) 등에 도입 추진 지속
 - * 연계매장 수: ('19) 173,723개 → ('20) 180,891개 → ('21 목표) 190,000개
 - (시스템 고도화) 연계매장 지속 확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및 호환성 한계 등 개선 추진

4 법·제도적 관리기반 강화

- 유통사 법적 의무 강화
 - (판매중개업자 의무강화)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개업을 추가*(법 제3조 '정의' 개정) 하여 중개업자 책임성 제고
 - * 제품 수거 등(수거·파기·교환·판매중지 등), 사고신고, 자발적 리콜 등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법제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유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법적 의무화 추진
- 관리원 업무권한 보완
 - (조사권한) 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 및 사업자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사업자 거부 시 벌칙(과태료) 기반 마련